

# 2003년도 농업관련 주요 일정

1~2월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2~3월

- 임시국회 개회

3월 말

- DDA modality 확정

5월 말

- 농림부 예산요구서 제출

9월 초

- 정기국회 개회

9월

- 이행계획서(C/S), 5차 각료회의 제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1~2월

지난 12월 말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 각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차기정부가 추진할 100대 과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차기정부 5년간의 농업정책을 풀어가는 출발점이며, 당장에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보면 노무현 당선자와 차기 정부의 농업정책의 일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수위는 통상교섭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FTA 발효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FTA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경제2분과(산업, 농림, 노동) 간사로 김대

환 인하대 교수가 활동중이며, 김대환 간사는 한국노총 자문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맡는 등 현실참여적인 진보적 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2분과의 위원으로는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전문위원에는 김인식 WTO국민연대 사무총장과 오내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다.

인수위의 활동 일정을 보면, 1월 15일까지 부처별 주요 현안과 일반업무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주요 현안 과제를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월 말까지 국정 철학 및 주요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2월 초순에 국정과제별 실천방안 수립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통령 취임 전인 2월 중순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 및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임시국회 개최

2~3월

노무현 대통령 출범 전후로 해서 열리게 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다루게 된다. 이는 차기 정부의 농정구상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첫 시험대가 되는 것이다.

우선, 작년 한해 동안 반대해 왔던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비준 문제가 있다. 현재 인수위에서도 한·칠레 간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FTA를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농업에 있어 그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칠레 FTA 국회비준 문제로 노무현 정부 출범 초부터 농민단체들

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추곡수매가 논의와 함께 한농연이 단독 입법청원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과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의 농업분야 핵심과제이다.

## DDA modality 확정

3월 말

DDA 농업협상에서 작년 진행된 각국의 제안서와 입장 등을 정리한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를 지난 12월 18일에 배포하였다. 또한, 오는 1월 22~23일 제네바에서 농업협상 특별회의를 열고 세부원칙(Modelity)을 정하기 위한 3단계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하빈슨 의장은 세부원칙 1차 초안을 작성하고 2월 24~28일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초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이를 다시 3월 25~31일 농업협상특위를 열어 세부원칙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될 세부원칙의 핵심은 관세,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됨으로 향후 농업협상과 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세부원칙에 따라서 올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분야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 농림부 예산요구서 제출

5월 말

정부 각 부처별 2004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를 제출받은 기획예산처는 사정작업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농업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8%대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농업예산을 10%대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또한, 농업예산에서 농민에게 지원되는 직불금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기정부 농정의 구체적인 실행이 예산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이 제시했던 공약이 당선을 위한 '인기영합주의(Populism)'로 사장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공약이행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 ● 정기국회 개회

9월 초

9월 1일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확정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게 되며,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부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마사회,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된다.

예산심의는 5월 말까지 제출받은 각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가 사정작업을 벌인 다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9월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6월 중에 정부로부터 각 부처별로 접수받은 예산요구서를 보고받고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예산의 집행은 각 부처에서 2004년도에 실제 집행되는 항, 목까지 구체적으로 심의하게 되므로 이는 2004년 정부의 활동 전반을 확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예산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농업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에 몇%를 확보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된다.

## ● 이행계획서(C/S), 5차 각료회의 제출

9월

3월말 완성되는 세부원칙에 따라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각국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는 세부원칙(Modelity)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각국의 실정에 따라 조율되는 것으로, 세부원칙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미국은 농산물에 있어 최고 관세율을 25%로 정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 수출보조금 완전 폐지, 국내보조금도 이행 첫해에 50% 감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케언즈 그룹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 등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민농연**